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2-12 / 2002년 12월 9일

내년도 중국경제 전망과 개혁과제

까오상취엔(高尚全)

中國經濟體制改革研究會 會長

1. 발표 내용

□ 제16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전면적인 小康사회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음.

-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평균 7.2%로 유지하여 1인당 GDP 3,000달러 달성.

□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간기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7.5%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7% 이상의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낙관함.

-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7.8~8% 정도로 예상됨.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실행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며, 주택, 자동차, 통신 등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내수부진, 농업문제, 실업률 증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음.

□ 현재 중국의 개혁 진전 상황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불균형 현상이 존재함.

- 첫째, 개혁이 개방보다 뒤져 있음.

- 중국의 개혁은 국내시장의 개방이 미흡하고, 시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음.

- 둘째, 거시적 차원의 개혁이 미시적인 개혁에 뒤져 있음.

-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산업구조조정과 고도화, 특히 비국유기업의 발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거시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세제시스템과 금융체제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셋째, 정부개혁이 기업개혁보다 낙후되어 있음.

-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정부부문의 개혁이 미진함. 정부개혁의 지체가 국유기업 개혁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원활치 못하게 하고 있음.

- 넷째, 정치체제의 개혁이 경제개혁보다 미진함.

-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와 관련되므로 단순한 경제개혁이라도 정치체제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정치개혁이 뒤져 있는 상황에서는 진일보된 경제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

□ 개혁의 추진은 △재산권 다원화, △자본 사회화, △분배 공정화, △관리의

法制化 등의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반드시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켜 재산권 다원화를 달성해야 함. 국가의 종합국력 향상과 인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유리하다면 소유제 형식은 중요하지 않음.
- o 중국공산당은 이미 15차 全代에서 ①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적 경제제도이고, ② 공유제의 실현형식이 다양할 수 있으며, ③ 비공유제경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④ 국유경제의 주도 역할은 주식보유를 통해 구현하며, ⑤ 국유경제의 비중이 약간 감소해도 중국의 사회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적 혁신을 제기하였음.
- 자본이 확대되고, 생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자본의 활성화와 축적이 발생함. 또한 국유자산의 자본화와 민영화를 통해 혼합경제와 주식제 경제의 비중이 커지는 자본의 사회화가 불가피한 추세가 됨.
- 과거에는 분배 측면에서 평균주의를 강조하였지만, 이제는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효율을 우선시 하되, 동시에 공평을 고려해야 함.
- 관리의 법제화는 법·제도에 대한 관념과 정부관리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요구함.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부가 복잡한 행정심사제도를 통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이는 경제효율의 저하와 제도적 부패를 야기할 수 있음. 법·제도를 ‘포지티브’개념에서 ‘네거티브’개념으로 바꿔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함.

2. 토론 요지

문: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와 더불어 국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인 내수, 외국인투자, 수출이 내년에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듣고 싶다.

답: 중국의 경제발전은 세계경제 발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내년도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은 재정장관과 경제고문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제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내년도 미국경제는 낙관적인 전망에 의하면 3~4%, 적어도 2%는 성장할 전망이다.

민간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 7.5%, 8%로 다양함. 아직 정부의 공식 전망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7% 이상의 성장이 예상됨.

내수, 무역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을 보면, 우선 내수는 주로 주택, 자동차, 통신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내년도 무역액은 6,0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민간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임. 금년 민간투자는 18%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증가하면 GDP 성장을 크게 견인할 것임.

문: 확대재정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또한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할 것임. 국채발행을 둘러싸고 국채발행을 통한 확대재정정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견해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그러나 중국정부는 후자의 입장임. 현재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바, 금년도 민간투자가 18%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함. 그러나 지속적인 민간투자의 증가를 위해서는 시장진입허가 완화와 개인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가 필요함.

현재 시장진입허가 완화는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바 국유독점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개인재산권의 보호는 지난 16차 당대회에서 명확히 제시하였음. 또한 헌법에 '개인의 합법적 재산 보호와 재산권의 불가침'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개인재산이 보호되지 않으면 재산의 해외도피나 무분별한 소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문: 농촌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답: 중국의 농촌문제는 3농 즉, 농촌, 농민, 농업의 발전속도가 느리다는 것임. 현재 농민의 소득증가는 도시민의 소득증가보다 느림. 그러나 농민소득의 증가를 위해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유희노동력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화 촉진을 의미함.

문: 중국은 점진적 개혁추진 방식을 통해 사회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 체제변화에 성공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이같은 미온적 개혁은 경제 각 부문에 시장과 계획이 병존하는 이원적 경제구조 형성과 이에 따른 시스템의 왜곡을 초래, 현재 중국이 직면한 政企미분리, 노동력공급과잉, 설비과잉, 국유기업 채산성 악화, 은행부실 확대 등 처리를 지연시키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음. 이에 대한 견해는?

답: 점진적 개혁은 적절했다고 생각함. 점진적 개혁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음. 구소련의 예를 보면 사회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음. 점진적 개혁으로 인해 개혁이 철저하게 실시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고 생각함. 급진적 개혁이 수반하는 사회적 충격은 점진적 개혁의 불철저함보다 클 것임.

(***)